

안축, 대선 결선투표제 주장...野단일화 대안되나

최장집 “다당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

민주, 이미 법안 제출...새누리 일각 반대

독자세력화에 본격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야권의 공식처럼 돼왔던 후보단일화의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 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최장집 이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손학규 의원 측이 설립한 '동아시아미래아카데미' 강연에서 다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양당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상적인 건 정당이 4~5개가 돼서 경쟁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투표에서는 지지 후보에 투표하고 두 번째 투표에서는 전략적으로 투표하면 된다. 군소 정당이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 의원의 의중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이 작년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 때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로 끝났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차기 대선에서 제3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 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선 출마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야권의 결집력도 높일 수 있어 안 의원 측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안 의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짜맞춰져 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매년 논란이 돼온 인위적 후보단일화의 폐해를 없애고 '제도적 단일화의 길'을 열 수 있고, 대통령 당선자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1차 투표시 후보 난립 및 2번

의 투표에 따른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대선 패배 후 지난 3월에 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 제도를 도입을 공식 채택했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데다 일각에선 과도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중심 연대여야”

손-안 연대설 거론 관련 측근들에 밝혀

독일에 체류 중인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최근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자신의 연대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을 도외시한 연대가 아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국에 있는 몇몇 측근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해서 "민주당 현 지도부가 '얼치기 개혁'이 아닌 본질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손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김영철 대표가 전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나중에 야권 대통령 차원에서 혁신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간에 창조적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조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도외시하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측면에서의 손 고문과 안 의원 간 연대설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손 고문은 (민주당과) 한국노총, 시민단체의 통합을 이뤄낸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손 고문은 민주당을 튼튼하게 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에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손 고문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야권 대통령 차원에서 혁신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간에 창조적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초 귀국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기숙형중학교 예산 8억 전액 삭감

전남지역 기숙형 중학교 관련 예산이 찬반 논란 끝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8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숙형중학교(신안 비금중) 기본·실시설계비 8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지난 24일 상임위원 교육위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

기 사업과 맞지 않다"며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돼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하자를 제기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서 기숙형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여수, 보성, 장성에 이어 4번째로 추진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 예산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관련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지방 정치

'아동공동가정' 조례 의결

전남도의회는 2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정영덕 의원(민주·무안)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이혼 등으로 버려지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며 "아동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지

광주 백화포럼은 28일 최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화포럼 양혜령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회의원을 대신하는 여성명부 부차지구 시·군회의원 제도는 정당공천제 폐지시 우려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 위축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공정거래 근절 '시즌2' 주력

사회적 약자 대책 마련...‘갑을관계 민주화’도 적극 추진

출범 1년 앞둔 與 ‘경실모’

여당의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다음달 5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당내 왜신과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6월 초 출범한 경실모는 대선 핵심 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

격성 심사 강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대선을 거치면서 경실모 활동은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논란과 '프랜차이즈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이 재연되면서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모는 지난해 제법개혁 입법과 제에 주력했던 '시즌1'에 이어 올해 '시즌 2'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핵심

주제로 정했다. 현재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라고 명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실모 대표인 5선의 남경필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실모 1주년 기념행사에서 "향후 시즌 2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불공정거래 근절에 힘쓰면서 아픈 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반대”

박해자 최고위원, 중앙정부에 쓸릴 우려 지적

민주당 박해자(광주 서구 갑) 최고위원은 28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안을 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때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야당의 창구 역할이 없어지고,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기초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신진 정치인들의

문호가 좁아질 뿐 아니라 기호를 정하는 문제와 돈선거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내세운 기초의원 여성할당제도도 실현되기 어렵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학자 때부터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시의 구의회는 폐지하고 시·군의회는 존치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이 부분은 논의 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신당' 전망에 대해 박 의원은 "안철수 신당 효과를 가능하려면 10월 재·보선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광주·전남에서는 10월 재·보선 지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배경에 대해서는 "호남출신 의원 중 신진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날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 X

M.H.타사 신제품 기적균일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날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대산프리모날

경매 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딱 한 분만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튜디오 합니다. 엔피엘가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정도를 가진분에 한합니다.

주, 오천옥선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